

“전북 대전환 이끌 최적 후보”

민주 김윤덕 의원, 지역방송 출연 이재명 후보와의 인연 털어봐 국민의힘 네트워크본부 해산과 관련 “여론 잠재우기 시도” 비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시 갑) 국회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만이 대한민국과 전북의 대전환을 이끌 최적의 후보라고 18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전북 지역방송(JTV 전주방송)에서 실시하는 전북도지사 예비선거인 인물탐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전북 최초로 돕기 시작한 인연과 인물에 대한 평가 등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이재명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가장 인지도가 없었고 여론조사 결과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전북에서는 누구도 나서지 않았고, 이재명 후보가 만나자고 제안이 왔을 때도 호감을 갖고 만난 것은 아니다”라며 첫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갔다.

김윤덕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당내 경선 준비과정에서 전북에서 경선을 준비해줄 인물을 찾고 있을 당

시야나후 후보와 달리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나서서 사람도 없었다”며 “이재명 후보로부터 연락이 와서 당시 경기도지사 관사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4시간 30분이라는 장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재명 후보가 도발적이다. 거칠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화를 거듭할수록 이재명이라는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박상 이재명 후보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굉장히 신중하고 진중함을 느꼈고 어떤 사안이 있으면 누구보다 깊게 생각하고 결정을 서면 끝바로 추진하는 강단을 보았다”며 “그동안 이재명을 잘 모르고

후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피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네트워크본부 해산’에 대한 논쟁을 내고 “사이비 종교인 건진법사가 관여한 윤석열 캠프 네트워크본부 해산은 여론 잠재우기 시도이다”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가 건진법사가 연루된 적이 없다는 캠프내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함으로써 스스로 무속인에게 선대위를 맡겼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대변혁의 시대를 무속인이 참여해 결정하는 것이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김윤덕 의원은 “무속인인 건진법사가 관여하고 있는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함으로써 국민 여론 잠재우기에 골몰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무속인이 선거캠프를 주관하게 된 배경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면서 “동시에 국민에게 진솔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도선관위 간부 및 15개 구·시·군선관위 사무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시달회의를 개최했다.

정확한 투·개표 관리 중점

전북선관위, 3월 대선·6월 지선 관리대책 논의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도선관위 간부 및 15개 구·시·군선관위 사무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시달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빈틈없는 선거관리를 위한 종합관리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선거관리인력·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효율적인 선거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선거관리인력 교육 강화와 사전·사건 예방·대응을 위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등 정확한 투·개표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설치 등으로 투·개표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맞춤형 투표편의 제공으로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해 안전한 선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변화에

맞는 법규운용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법규안내서비스를 제공하되,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며, 선거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공무원의 선거관련 행위는 중점단속해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중대선거범죄는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행위, ▲공무원 등 선거관련 행위, ▲사조지 설립·이용행위 ▲선거여론조사시절과 외국 공표행위 ▲(지방선거)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등이다.

아울러 과학적 분석·조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온라인상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허위사실·비방 특별 대응팀을 운영해 허위정보와 위법게시물 확산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전북선관위는 “그동안 축적해온 선거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양대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참여·공정·통합의 선거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민주 도당 #해시태그 선대위 지역혁신단 오늘 첫 기획회의

MZ세대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해시태그 공동선대위원회 산하 지역혁신단은 19 일 저녁 7시 첫번째 기획회의를 갖는다.

지역혁신단은 나를 위해, 지역을 위해 합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최서연 공동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에 맞춰 지역사회 변화 주체 발굴 및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활동과 영상 등을 통해 정책을 전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추진 사업으로는 ‘지속가능성 : 지역도문화 (서울이 아니면 왜)’, 다양성 : 자유선언 전북이 운다, 캠페인 : 고민살게 고민파방’을 통해 전북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고 스피커 역할을 하고자 한다.

#해시태그 공동선대위원회 최서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지역혁신단을 통해 전북권 내에서 소소한 시도들을 다양하게 실행해 지역 주체들의 무대를 만들고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제1차 임시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지방의회법’ 제정을

전국 시도의회의장들, 임시회서 건의문 채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제1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등을 채택했다.

송지우 전북도의회의 의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 및 조직예산편성권은 포함

하지 않아 자율적 인사권 행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 지방자치법만으로는 진정한 기관대립형 권력구조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위해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국비지원 확대도 건의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쇠퇴지역이나 기초생활 인

프라 미달지역에서 추진되는데,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에 부차매입 비용을 사업비 총액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비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어려운 만큼, 사업계획과 집행에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국비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학생건강검진을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으로 통합’할 것과 ‘소음공해 규제기준 강화 촉구 건의문’ 등도 채택했다. /유호상 기자

정읍시의회, 올 첫 임시회 개최 유진섭 시장, 시정운영 방향 발표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는 제27회 임시회를 18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했다.

조상중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과 의회 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로서 정읍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주민 조례 청구 발안 제도, 정책자문 전문인력 확보, 주민참여 확대 등 새로운 제도 정착 및 생활 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정상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 추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과감한 도시계획 관리와 시민들의 휴식과 건강을 위한 공간 조성, 우리시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불필요한 공영자산을 선별해 정리할 것 등을 역설했다.

이어서 유진섭 정읍시장이 2021년 주요 시정 성과와 보건·경제·농업·문화·관광 등 주요 사업 계획 등의 내용으로 “2022년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한 후 제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마무리됐다. (관련기사 8면)

이번 임시회는 상임위원회별 안전심사에 이어 2022년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마무리 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새만금 정책 목표, 대선 공약에 반영토록”

국힘 새만금 특위, 원희룡 정책본부장과 공약 논의

국민의힘 선대본부 새만금 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 정운천 위원장과 김경민 특별위원장은 지난 17일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에서 원희룡 총괄정책본부장 윤창현 총괄정책본부장을 만나 새만금 공약에 대해 논의했다.

새만금 특위는 정책본부와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국자투자진흥기금 지

정, 새만금 복합리조트 건설 및 관광 레저산업 활성화, 공항·항만·철도 구축을 통한 트라이포트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과 윤창현 부분장은 “전북의 미래가 새만금에 달려 있다”며 미래 전북의 먹거리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혁신적인 구상을 공약에 담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정운천 상임위원장은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한 위원회가 선대위 산하 특위로 구성된 것은 여야를 통틀어 처음”이라며 “새만금 정책 목표를 대선 공약에 반영해 새만금의 발전을 이워내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공청회를 통해 새만금 공약을 제시하고, 도민 의견을 경청한 뒤 이를 정책본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노동자 보호 더 두텁게... ‘노동대전환’

대전환 선대위 전북노동선대위 발대식... 이재명 지지 결의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전북노동선대위가 18일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은 대전환 선대위 안호영 노동위원장과 중앙선대위 노동위원장 김만재 공동위원장,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장 이명연 총괄본부장 등 각 산별 부위원장, 노조원이 참석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노동 공약 발제 및 노총의 지지 호소를 목적으로 출범했다.

안호영 노동위원장은 “노동위원회 전북본부 발대식을 갖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기준을 위한 노동 3법 등이

제정됐지만 아직도 두텁게 보호하고, 더 넓게 보듬고, 촘촘하게 살피는 ‘노동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준다는 역강부야(抑強扶弱)를 실현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동자와 함께하는 노동정책을 직접 펼쳐왔다”며 “누구나 안전하게 일하고 차별받지 않는 일터를 만드는 노동자 출신 이 후보를 우리 전북본부 노동자가 앞장서 응원하자”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대된 노동위원회 전북본부 발대식을 갖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기준을 위한 노동 3법 등이

동물위생시험소 업무 범위 규정 명확하게

이원택 의원, 개정 법안 대표발의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및 시설이용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고, 법률 용어가 알기 쉽게 정비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18일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및 시설이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동물위생시험소법’은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소장 시설이용, 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 및 시설이용과 관련해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시험소에 두는 소장과 공무원 관련 조항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이 알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개정안은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범위 명확화를 위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동물에 대한 전염병·질병

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도록 했다.

또한, 시험소 시설 이용 업무 범위 명확화 및 이용자 범위 확대를 위해 시험소 시험 이용 업무 범위를 동물방역과 축산물위생에 관한 연구와 검사로 명확히 하고, 시설 이용자의 범위를 수의사·의사·치과 의사·한의사·약사, 수의·축산·환경 분야 관련인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시험소장의 자격 중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업무 종사 경력 기간(8년 이상)을 새로이 마련했다.

이원택 의원은 “동물위생시험소 이용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전문 종사자들이 축산물 위생에 관한 연구와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장 중심의 실용적 연구 활동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